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배포

1.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등 제약분야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예방이 중요한바, 제약분야 맞춤형 공익신고제도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오니 각급 기관에서는 기관 보유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제약분야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 보건소에 동 안내문 전달 바람

붙임 : 제약분야 종사자 대상 공익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감사담당관), 부산광역시장(감사관), 대구광역시장(감사관), 대전광역시장(감사관), 인천광역시장(감사관), 울산광역시장(감사관), 강원도지사(감사관), 충청북도지사(감사관), 전라북도지사(감사관), 전라남도지사(감사관), 경상북도지사(감사관), 경상남도지사(감사관), 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청렴감찰관), 경기도지사(조사담당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조사과장), 광주광역시장(감사위원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경북대학교병원장, 경상대학교병원장, 충남대학교병원장, 충북대학교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전북대학교병원장, 강원대학교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장, 국립암센터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조사관 **이유경** 행정사무관 **장은경** 공익심사정책 전결 2017. 12. 21.
과장 **양동훈**

협조자

시행 공익심사정책과-6772 (2017. 12. 21.) 접수 감사담당관-7783 (2017. 12. 21.)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어진동)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757 팩스번호 044-200-7948 / yk260@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공익신고제도



(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신고 주체

누구든지(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

-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
-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수입
-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
-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

☞ 「의료법」, 「약사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

신고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관할 행정·감독기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등

신고 방법

인터넷창에 **‘청렴신문고’** 입력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 신변보호
- 책임감면

신고 보상금

- 보상 : 20억원 한도에서 벌금·과징금 등의 최대 20%(내부신고자에 한함)
- 포상 :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 부패·공익신고 ⇒ 공익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사건 처리 : **044-200-7752~7761**
-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 **044-200-7772~7779**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협조를 이유로 신분상(해고 등)·인사상(징계 등)·경제적(계약해지 등) 불이익과 정신적·신체적 손상(집단 따돌림·폭행 등)을 받지 않습니다.
-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로 신고자·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행정처분이 감경·면제될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최대 20억원)

